

박주민 “법 개정없이 가능한 검찰 개혁 시작”

민주당 첫 특위 회의...패스트트랙 법안 등 로드맵 마련 시행령·내규 수정...피의사실 유포 금지·인권침해 최소화

민주당이 1일 당 검찰개혁 특위 회의를 처음 열고 본격적인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에서 “수사는 수사, 개혁은 개혁이다. 이제는 검찰 개혁의 시간”이라면서 “국회, 법무부, 검찰이 삼각 편대를 이뤄 검찰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도 “촛불 정신으로 탄생한 정권”이라면서 “그만큼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국민의 열망을 반드시 실현할 것으로 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박 위원장과 이 의원 외에 이종걸 박찬대 송기헌 이재정 이철희 의원 등이 참석했다. 또 이상민 이춘석 박병계 금태섭 의원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고 특위는 밝혔다.

특위는 인원 구성을 완료하는 한편 각각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과 검찰 자체 개혁 방안 등을 다루는 1·2소위를 구성해 개혁 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특위는 입법 시안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앞서 시행령과 내규 등을 통한 검찰 자체 개혁에

일단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법 개정 없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의당정 등을 통해 긴밀히 내용을 공유해 만들 생각”이라면서 “문 대통령께서 두 번이나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명명한 만큼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검찰과도 관련 얘기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 행사 과정을 아무도 제한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것에 대해 외부 감사나 규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지금도 수사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유포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압수수색 과정이나 강제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 인권침해가

최소화되도록 살펴볼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조성식 정책위의장은 “다시 촛불을 든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중단없는 개혁을 통해 검찰을 시민의 민주적인 통제를 받는 정당한 사법기관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라면서 “당 특위 중심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대책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관석 의원은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도 수사, 자기 개혁으로 촛불 민심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총독 사건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성엽 “누구든 오라” ‘분당 수순’ 바른미래, 비례대표 거취 관심 집중

대안정치연대 대표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1일 “기득권 양당정치 개혁의 여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라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바른미래당의 분당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3지대에 대한 국민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정쟁에 실증 나고 지친 국민들에게 변화와 희망의 정치, 청사진을 제시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가 분당 수순인 바른미래당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한 것은 바른미래당 호남 세력을 향한 ‘리브콜’로 해석된다.

앞서 유 대표는 전남 민주평화당 출신 무소속 김경진 의원과 국민의당에서 한술 밥을 먹었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오찬을 함께하며 신당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대안정치 소속 최경환 의원은 바른미래당 호남계 의원과 무소속 의원, 평화당 잔류 의원들에게 신당 창당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공개 제안한 상태다.

유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을 만나 “어제 오찬에서 김경진 의원이 ‘대통합이 필요하다’고 했고, 나는 ‘대통합이 어렵다면 먼저 소통합시다 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평화당 잔류파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을 활짝 열면 같이 못할 이유도 없다”며 “그분들도 외롭지 않으나. 숫자도 적고, 두 세분은 마음이 떠 있어 함께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비당권파 안철수계 6명 제명 요구... 당권파 “배려 없을 것”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분당 수순에 돌입한 가운데 비례대표 의원들의 거취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들은 당적이 정리되지 않을 경우 탈당에 동참할 수 없는 만큼 당 지도부에 비공식적으로 ‘제명 조치’ 요구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는 자신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당에서 제명당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당적 말소는 소위 ‘족쇄’를 풀어주는 조치인 만큼 바른미래당이 갈등과 반목 속에 ‘합의 이혼’의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주목된다.

현재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의원 총 15명 가

운데 비례대표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6명(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성·이태규)이다.

일단 당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당권파는 비당권파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한 ‘배려’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당권파 핵심 관계자는 “비당권파에 속해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다수가 개별적으로 제명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러나 당 지도부는 전혀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의원의 출당은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이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최소 17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당권파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비당권파는 비례대표 제명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 없다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 자칫 탈당이 공식화될 경우, 당내 싸움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당권파 측에서는 “당의 주인인 우리가 왜 먼저 탈당을 하겠느냐. ‘세입자’ 신분인 당권파가 먼저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권은희 의원은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당내 갈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수포가 될 경우 각자 깔끔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본적 생각들은 갖고 있다”고 했다.

또 일부 호남 중진들도 합의 이혼에 긍정적이어서 극적인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최경환 “작은도서관 휴폐관 많아 지원 절실”

국감 브리핑

전국에 잇달아 생겨나는 작은도서관이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문을 닫고 있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경환(광주 북구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은도서관 중 올해 새로 문을 연 곳은 413군데인 반면, 휴·폐관한 곳은 468군데로 신규 도서관 숫자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현재 전국의 작은도서관은 광주



415곳, 전남 148곳을 비롯해 총 6786곳으로서, 근무하는 직원 수는 작년 6343명에서 올해 5505명으로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415곳 중에 휴관이 12곳, 폐관이 13곳이며, 전남은 148곳 가운데 휴관 1곳, 폐관 7곳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휴·폐관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

석했다.

사서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보유한 작은도서관은 전체의 10.7%(729곳)에 불과했으며, 직원이 없는 작은도서관도 38.5%(2614곳)였다.

반면, 작은도서관 지원 정책인 ‘순회도서관 사업’ 혜택을 받은 작은도서관 비율은 작년 14%(886곳)에서 올해 9%(614곳)로 오히려 줄었다.

최 의원은 “정부가 지역 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은도서관 외연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체계적 운영 모델 개발과 운영비 지원 등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황교안 “檢, 나를 치고 한국당은 두라”

‘패스트트랙 수사’ 자진 출석... “의원들 소환 응할 수 없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총독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저의 뉘를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한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을 중단하라. 검찰 수사 방해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라”고 했다.

황 대표는 “검찰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수사에 힘쓰기를 바란다”며 “저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반민주적 폭거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통보가) 온 것은 없다”며 “언제는 조사받겠다.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린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 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소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 소환 요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호남동 대원빌딩 총별 “특별분양”

높은 전용면적 75%
11,12층 천정고 6M
분양가 470만원 ~
환기 공조 시스템 완비
중앙 냉난방 시설완비
300대이상 주차공간

“추천업종”

- 1 휘트니스센터, 레저스포츠 시설
- 2 특급 한방병원, 공공기관 사무실
- 3 일반/공유오피스 사무실
- 4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분양문의 : (주)대원빌딩
062) 234-1233
위치 : 동구 천변우로 369 (호남동 23-2)